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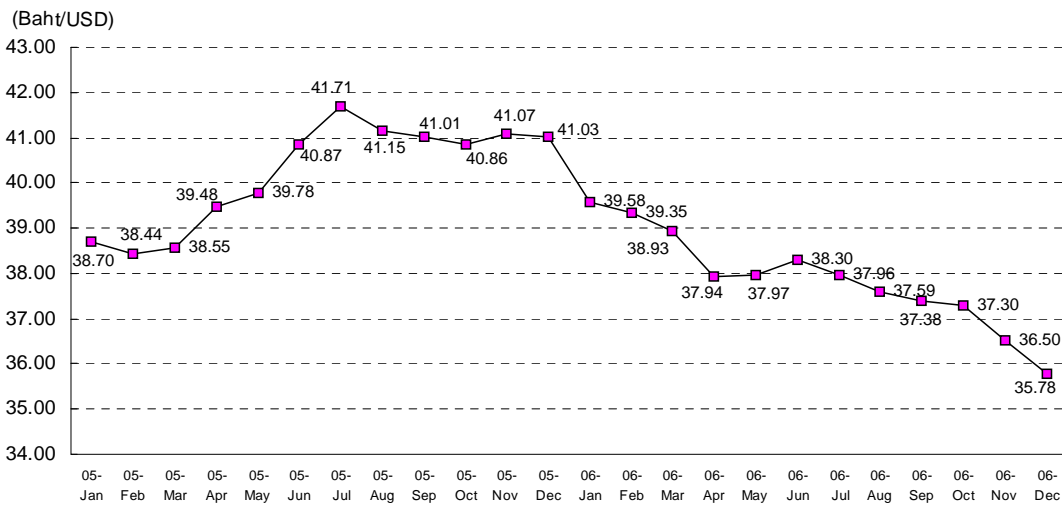
바트화 절상에 대한 태국 군부 정권의 대응과 전망

작성일: 2007년 1월 21일
이재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 2006년 태국 바트화 동아시아 통화 중 최대 절상폭 기록

- 2006년 미달러화 약세로 인하여 동아시아 통화 전반에 걸쳐 절상 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태국 바트화 바트화가 동아시아 통화중 최대 절상폭을 기록하면서(2006년말 현재 전년동월 대비 약 13% 절상) 태국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1-1> 바트화 월평균 환율 추이 (2005~2006년)



자료 : Bank of Thailand

2. 투기자본의 바트화 공격의 주 원인

- 2006년 미 달러화 약세로 동아시아 통화 전반에 걸쳐 절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바트화가 투기자본의 주 공격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 달러화 약세와 국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비교적 기대 수익이 높은 동아시아 신흥경제국으로의 투자 집중 및 투기성 단기 자금이 태국으로 급속인 유입된 것을 최근 바트화 절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태국 바트화는 1997년 동아시아 통화위기 시절에도 투기자본의 주된 공격대상이었고, 2006년에도 동아시아 통화 중 최대 절상폭을 기록하는 등 투기자본의 전통적인 주 공격대상이 되어왔음.
 - 투기자본이 바트화를 전통적인 공격대상으로 삼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 태국 및 주변 신흥경제국들의 외환정책 및 투자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주변 동남아 신흥경제국 중 중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은 제도적으로 환율변동을 제한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관리변동환율제로 단기성 환투기를 통한 기대 수익이 낮은 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비교적 투자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즉, 자율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전통적으로 주변국가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제공해온 태국이 동남아 신흥경제국 중 투기성 단기 자금의 유출입이 가장 용이하고 기대 수익도 높아 투기세력의 주된 공격대상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음.

3. 유동성 통제를 위한 태국 정부의 조치

- 2006년 12월 태국 정부는 바트화 절상과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의 악순환을 억제하고자 아래와 같이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 억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음.

가. 태국 중앙은행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 억제 조치 발표 (2006. 12. 04)

-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화 절상으로 인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에게 채권 거래 자제 요청, 채권 보유기간 3개월 이상으로 제한, 스왑거래 만기를 3개월 연장하면서 단기 자금 유입 억제에 나섰다.
- 금융기관들에게 만기 도래 채권에 대한 채권환매조건부 매각(sell-and -buy back transaction) 자제 요청.
- 비거주자의 국채(government bond), 단기재정증권(treasury bill), 태국은행 은행채(BOT bill) 등 각종 국공채 보유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함.
- 기존 3개월이던 스왑거래 만기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단기 자금 흐름을 제한함.
- 단기 자금 흐름 억제로 인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시장 위축이 우려됨.
-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태국 단기금융 시장침체의 우려에 대해 태국 중앙은행측은 현재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 규제조치들로 인한 단기금융 시장의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유동성 조절과 동시에 채권 시장 침체를 막는 것이 현재 직면한 주요 과제이며, 향후 유동성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망됨.

나. 외환의무예치안 발표 (2006. 12. 19)

- 태국은행 타리사 와타나가세(Tarisa Watanagase) 총재는 바트화에 대한 투기성 단기 자금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바트화로 환전되는 모든 외화의 30%를 1년 이상 태국은행에 예치하는 의무예치안(reserve requirement)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 동 의무예치안으로 무역거래나 해외직접투자 투자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태국 바트화를 구입하거나 환전한 외환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년 이상 외환 예치 기간을 의무화하며 태국에 최소 1년 이상 자금이 예치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금회수를 신청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최소 1년 의무 예치기간 심사를 마친 후, 태국은행을 통해서 자금회수 요청 및 회수가 가능함.
 - 만약 1년 이내에 자금 회수를 할 경우에는 기존 예치 금액의 2/3만 회수 가능함.
 - 2006년 12월 19일 이전의 외환 거래는 의무 예치 면제.
 - 해외직접투자(FDI)나 무거래 송금(unrequited transfer)의 경우는 즉시 의무예치에 해당되지만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을 제출 시 회수 가능함. 즉, 금융기관의 조사허가를 득하고 태국은행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태국은행을 통해 즉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의무 예치 외환을 익월 7일까지 태국은행으로 외환 송금하여야 함.
 - 동 의무 예치로 얻어진 수익은 공익 자금으로 귀속됨.

다. 외환 의무 예치안 완화 (2006. 12. 20)

- 태국 정부는 12월 18일 발표한 외환 의무보유 조치로 주가가 전일 대비 약 14% 폭락하자, 태국 금융 당국은 하루만에 증권 및 선물 분야를 의무 예치안에서 제외시키는 완화조치를 발표하였음.
 - 첫째, SET(Stock Exchange of Thailand) 및 대안투자시장(MAI: 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에 상장된 증권(뮤추얼 펀드 제외), 태국선물(TFEX: Thailand Futures Exchange), 태국농업선물(AFET: Agricultural Futures Exchange of Thailand) 투자에 대해서는 30% 의무예치를 면제함(금융기관 증빙 제출 요망).
 - 둘째, 비거주자(Non-resident)의 계좌는 추후 공지시까지 300만바트 이상 보유 가능.
 - 셋째, 상기 투자로 인한 바트화 이익금은 비거주자 바트화 계좌에 입금 가능.
 - 넷째, 19일 이전에 일어난 증권 및 선물 거래관련 외환 거래도 30% 의무 예치를 면제함.
 - 다섯째, 이외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번함없이 30% 의무 예치를 실시함.

라. 태국 통화운용체계 개혁(2006. 12. 25)

- 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태국 금융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의 동의하에 하기 3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기로 함(2007년 1월 17일부터 발효 예정)
 - 첫째, 통화정책 목표율을 14일 환매율에서 1일환매율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관리를 통화정책에 더 용이하게 반영하고 단기 이자율도 시장 상황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둘째, 태국은행이 정책금리 50bp 수준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야간 거래를 제공하는 일몰 유동성조정창(End-of-day Liquidity Adjustment Window)을 마련하여, 낮은 이자율로 인한 시중금리 변동을 억제함.
 - 셋째, 의무 예치안에 해당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납부 기간을 통화정책위원회 개최일에 맞춤. 지급준비금 납부 기간은 수요일에서 시작해 14일에 맞추어 2번째 화요일날 종료됨.
 - 이로써 이자율 상승 기대가 강할 때 유동성 변동 및 단기 이자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개정(2007. 01. 09)

- 2006년 Shin Corp.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탁신 前총리의 사임압력의 계기가 되어왔던 외국인의 지분 및 의결권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외국인 사업법 개정안이 2007년 1월 9일 내각의 승인을 받음.
 - 금번 개정안은 기존 The Foreign Business Act 1999 중 하기 주요 3개 분야를 수정하였음.
 - 첫째, 외국인 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기존 지분을 50%보유 기준에서 의결권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함. 현재 외국인이 의결권을 50%이상 행사하고 있는 기업은 1년 이내에 지분 및 의결권을 50% 미만으로 재조정 하여야 함.
 - 둘째, 무허가 영업이나 허위 명의 사용에 대한 벌금을 증액함.
 - 셋째, 기존 태국 진출 기업 중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List III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나, 향후 태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금번 개정안에 해당됨.
 - o The Foreign Business Act 1999는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List I ~ III로 분류해 개방 정도를 차등화함(List I: 투자금지, List II: 상무부 장관 승인, List III: BOI 승인).

- 반면, 자동차, 전자 등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의 투자 진흥안(Investment Promotion)에 해당하는 주요 투자업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태국 SET(Stock Exchange of Thailand)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사업법 개정으로 주로 무선통신 및 부동산 분야로 총 15개 상장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번 지분 및 의결권 제한으로 단기적인 자금 유출이나 투자회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태국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중장기적 투자환경 조성 및 FDI 유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 해외투자상한선 상향 조정(2007. 01. 15)

-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내 기업들의 외화관리 편의성 증대 및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및 투자 관련 외환규정 개정 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 1월 15일부터 기업 및 개인의 연간 해외투자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였음.
 - 첫째, 해외투자 혹은 해외자금대부 한도를 개인별 연간 1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상향 조정함.
 - 둘째, 태국 법인의 해외 투자 혹은 자금대부 한도는 연간 2천만달러로 함.
 - 셋째, 각종 연기금, 증권, 보험 및 기타 금융 관련 회사들이 태국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태국은행 사전 허가를 면제함.
 - 넷째, 향후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외환계좌 입금 한도를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백만달러로 제한하며, 외환계좌 보유 한도는 기존 개인별 50만달러, 법인별 5천만달러로 유지함.
 - 이번 해외투자 상한선 상향 조정은 2006년 미달러화 약세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국내 유동성 해소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한 금번 해외투자액 상한선 상향 조정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2007. 01. 17)

- 태국 통화정책위원회는 2007년 태국 경제성장의 위협요소 증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통화정책 기준율인 1일 환매율을(1-Day Repurchase Rate)를 2007년 1월 17일부로 0.2235% 인하하였음.
 - 태국 정책 금리는 지난 2006년말 14일 환매율에서 1일 환매율로 정책 금리가 변경된 바 있으며,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의 결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7일에 기존 4.9375%에서 4.75%로 인하하였음.

- 금번 조치는 지속적인 수출은 증가와 완만한 인플레이션 등 양호한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연말 외환의무예치안 및 신년폭탄테러로 인한 증시위축과 같은 잠재적 경제 하락 요인을 고려한 경기부양책으로 간주됨.

4. 향후 전망과 과도 정부의 과제

- 태국 과도정부의 최근 단기자본 유입 통제 조치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갑작스러운 투자여건 축소로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 태국 과도정부는 작년말부터 각종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극히 일시적인 환율 안정 효과가 있었을 뿐,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으로 인한 바트화 절상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오히려 갑작스러운 자본 통제에 의한 증시불안과 외국인 기업 규제 강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 현재 태국에 주재하고 있는 다수 해외 상공회의소들은 태국 과도정부의 국수주의적 경제정책 때문에 향후 태국내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태국 과도정부는 정권 정당성에대한 지지율 하락과 경제 혼란이라는 정치·경제적 난제에 봉착한 상태임.
 - 현재 탁신 前총리 측근의 부패혐의 조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고, 2007년 신정부 구성을 위한 개헌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쿠데타 명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더욱이, 최근 발표한 각종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 반면 외국인 투자 여건이 축소되어 現쿠데타 정권이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수출 증가, 물가 안정 등 경제 호조세 유지와 각종 정책 조정을 통한 대외 신인도 회복이 필요함.
 - 2006년 태국 경제는 최근 바트화 절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이루어내며 비교적 완만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각종 정책으로 인한 증시 혼란과 대외 신인도 하락은 신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과도 정권의 최대 난제로 지목되고 있음.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국수주의적인 정책들에 대한 정책 수정, 예상가능하고 안정적인 외환정책, 투자 여건 활성화를 통한 대외 신인도 회복 등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수정 등이 시급한 실정임.

<참고 문헌>

Arunmas, P. (1 Jan 2007). "Farm exports set to boom his year despite strong baht". Bangkok Post.

Bank of Thailand News <www.bot.or.th>

Ganjanakhundee, S. (9 Jan 2007) "Frustration over junta's lack of forceful action". The Nation.

Srimalee, S. (11 Jan 2007). "Investors in a pickle over new foreign business law". The Nation.

Sricukkasem, A. (19 Jan 2007). "Officials defend their capital-control decision". The Nation.

----- (19 Jan 2007). " BOT's cure was far too harsh, and ineffective". The Nation.

The Nation. (18 Jan 2007). "Market says move is too late to help".

Kazmin, A. (18 Jan 2007). "Thailand acts to reassure foreign investors". Financial Times.

The Nation. (15 Jan 2007). "Ministers lax in tackling graft: AEC".

Zhou, W. (10 Jan 2007). "Update: Thai Stocks Plunge On New Restrictions For Foreigners". Dow Jones.